

“배합사료 가격 원가 즉각 공개하라!”

양돈협, 사료업계 ‘상생’을 위한 지구책 마련 촉구 죽어가는 농가 외면한 담합 행위 의혹 제기도

배합사료업계의 추가 가격인상 추진과 관련,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가 담합의혹을 제기하며 배합사료 원가공개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양돈협회는 지난 2월 1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돼지 두당 4~5만원의 적자가 불가피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료업계가 사료가격 추가인상을 강행하는 것은 사료회사만 살고 양돈농가는 죽으라는 처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양돈협회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사료가격이 인상된 지난해에도 사료회사들의 영업이익이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면서, ‘마른수건을 다시 짜는’ 자세로 사료가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원가를 공개해 상생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제곡물가격 상승시 사료가격에 즉각 반영하고 있는 반면 하락시에는 그렇지 않은 사료업계의 행태에 농가들은 할 말을 잃었다며 양돈농가들의 피나는 원가절감 노력에 사료업계도 적극 동참, ‘상생’의 길을 찾되 원가공개로 통해 농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료업계 뼈를 깎는 지구책으로 ‘상생’의 길 마련해야

사료원료 품질을 유지하면서 원가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철저한 고민을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사

료포장재 변경이나 향미제 사용량 감축 등 사료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곡물가격 인상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존재하는 만큼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료가격 인상 담합 의혹 제기

협회는 이어 경영상태나 곡물재고가 다를 수밖에 없는 사료회사들이 줄줄이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담합’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음을 지적, 즉각 중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제소도 불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협회는 또 밀가루 원가가 80% 인상됐음에도 라면과 과자의 소비자가격은 11% 상승에 그치며 사료가격과 대조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 주목,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먹는 돼지고기 산업을 지키는 책무를 맡은 정부의 사료가격 통제가 왜 이뤄지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사료가격 폭등을 방지할 경우 6백년 역사의 승례문과 마찬가지로 국내 양돈산업도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따라서 정부와 사료업계, 농가들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특단의 사료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양돈**